

'사람 중심 지속가능한 생태교통도시 구현'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혁신적 교통서비스 구현 등 교통 분야 4대 추진전략 제시

전주시가 전주·완주시간선제를 중심으로 한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통해 시민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자전거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하고 친환경 수소 시내버스를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혁신을 꾀할 계획이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는 25일 신년브리핑을 통해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태교통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한 교통 분야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4대 추진전략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 확립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생태교통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인프라 확충 △고객 감동 맞춤형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등이다.

먼저 시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주·완주 시간선제를 본격 시행한다. 간선버스·일반버스·마을버스를 중심으로 3단계로 구분 추진하며 주요 도심과 간선도로를 배차 간격 10분으로 연결하는

간선버스를 도입하고 일반버스는 학교, 병원, 시장 등 생활권 위주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을버스는 농촌 지역 및 시내버스가 드문 지역에 운영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한다.

이뿐만 아니라, 시는 시내버스 친절도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을 늘리고, 시민불편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단 운영을 강화하고 중간시간표 도입, 서비스평가에 따른 재정 차등지급, 압행감찰단 상시 운영을 추진한다. 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자콜 택시 1대와 임차 택시 4대를 추가로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75개소 안전시설 확충에 집중한다. 통학로 설치구역 24개소중 21년도까지 7개소를 완료하고 올해 17개소 통학로를 확보할 계획이며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는 61개소 설치를 완료하여 올해 미설치 14대

를 마무리 설치 할 계획이다. 또한 과속단속카메라 24대를 확대 설치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실시간으로 신호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세대 교통운영 시스템인 ITS(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사업을 추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 스마트 횡단보도, 감응신호등 스마트교차로 등을 운영한다. 신호교차로 813개소중 86개를 설치 완료하고 올해 36개소를 추가 설치하며 200개소 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교통정체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통과 생태가 함께하는 도시를 위해 수소 버스 35대를 추가 도입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한다. 구체적으로 기린대로와 백제대로 등 8개 노선, 22km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거나 정비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삼천년 자전거도로 분리사업을 펼친다. 또 △다양한 체험형

자전거 구입 △대여소 추가 설치 △운영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 공영자전거 활성화를 특화해 운영하고, 생태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향후 5년 동안의 연차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활성화 시행계획 등이 담긴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추진한다.

끝으로 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등 법적 의무사항을 관리해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양질의 차량등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올해에는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지·간선제 등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를 구현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생태교통도시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감동을 주는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더욱더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로 시민이 존중받는 생태교통도시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전주시, 음식·선물 구매... 상인회, 주차장 한시적 무료 개방

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보기 행사를 통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들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 동안 남부시장과 신중양시장, 모래내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명절 음식과 선물을 구매하는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장보기 행사는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부서별 장보기 장소와 일정을 분산해 추진된다.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도 명절 준비

로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하고 자체 할인판매 행사도 한다. 대표적으로 남부시장번영회는 오는 29일까지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앞에서 견어물과 버섯, 과일, 잡곡 등 설 명절 선물세트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할인행사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설 차례상 등 성수품 구매 비용은 26만 5552원으로,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35만7188원과 비교해 약 25.7%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코로나19 방역 긴급대책회의

김승수 시장 주재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따라 방안 논의

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는 이동 자제를 호소했다.

전주시는 25일 김승수 시장과 박형배 부시장, 실·국장급 간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지난 24일 전주시역 확진자가 역대 하루 최대치인 122명이 발생했다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의 이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시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12일 동안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 특별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점 점검대상은 △중교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유형주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로, 시는 기본방역수칙 이행 여부와 행정명령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시는 많은 귀성객과 시민들이 찾는 것으로 예상되는 터미널과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봉안시설과 공원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비대면 성묘 이용을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입소자 PCR검사 및 주기적 자연환기 등 방역수칙을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인력보강 등을 통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을 강화하고, 설 연휴기간에도 상황관리와 재택치료관리 등 코로나19 비상대응반을 운영함으로써 확진자 및 재택치료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현재 미운영 중인 실내·외 체육시설과 동물원, 경로당 등 공공시설의 운영준간기간을 설 연휴를 포함해 내달 6일까지로 연장하고, 도서관은 기존대로 수용인원의 50% 이내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가동

전주시는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귀성·귀경객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특별교통대책을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와 구는 각각 교통대책상황실을 설치해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비상근무에 나선다.

전주시 교통정보센터에서도 교통흐름관찰용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 차량 이동상황을 파악하고 교통 정체지역의 탄력적 신호 운영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가 돌입한다.

시는 또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등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무료 개방 공영주차장은 △종합경기장(1.29~2.2, 638면) △동물원(1.31~2.1, 840면) △노송천(1.31~2.1, 70면) △한옥노상(1.31~2.1, 135면) △삼천2동(2.1, 194면) △서신동(2.1, 131면) 등 6곳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정상 가동한다. 장애인 콜택시 이자콜의 경우 주·야간 상안 없이 24시간 운영되며, 벽지·오지 주민들을 위한 마을버스 '바로'도 14대가 정상 운영된다.

/김윤상 기자

혁신도시 행정·문화 거점 주민센터 '첫 삽'

전주시, 혁신동 주민센터 건립 착공식 개최... 내년 1월까지 90억원 투입

전북혁신도시 주민들의 행정·복지·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주민센터 건립공사가 마침내 첫 삽을 떴다.

전주시는 25일 혁신동 주민센터 신축부지(덕진구 정동 1114)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마숙 전주시의회 부의장,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주민센터 건립을 기원하는 착공식을 했다.

전북혁신도시 주민들의 정주여건개선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혁신동 주민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2018년 혁신동이 신설된 이후 협소한 임시 주민센터 청사를 이용해 왔던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도비 32억 원과 시비 58억 원 등 총 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내년 1월 개관 예정인 주민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3363㎡(1019평) 규모로 지어진다.

지상 1층에는 민원실을 비롯한 행정공간이 들어선다. 지상 2층에서 4층까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을 비롯한 혁신동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갖



전주시는 25일 혁신동 주민센터 신축부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마숙 전주시의회 부의장,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주민센터 건립을 기원하는 착공식을 했다.

취질 예정이다. 또, 어린이 돌봄 공간과 가족 카페 등으로 구성된 혁신동 주민들의 육아와 돌봄, 나눔, 가족 여가생활이 이뤄지는 다담센터 공간도 생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3월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를 통해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고 진·출입이 편리한 설계안을 선정했으며, 지난해 11월 최종 설계를 마무리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국 최고의 시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